

되도 앓을 구조조정 내세워 노동조건 악화시키지 말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 공기업화하라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4~5면

임금·노동조건 위해
싸우는 게
경제주의인가?

10면

홍상수 감독,
이혼 유책주의에
걸려 넘어지다

9면

트럼프에 맞선
샌더스 발
'민주적 사회주의' 열풍

8면

홍콩 송환법 반대 투쟁
중국은 사회주의인가?

6~7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등
노동자 투쟁들

3, 11, 12면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김지윤

정의당 당직 선거가 시작됐다. 7월 8일부터 13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당 대표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일찌감치 출마가 점쳐졌던 현직 의원인 심상정 후보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전 공공연맹 위원장 양경규 후보가 출마했다.

두 후보가 모두 노동운동 활동가 출신 베테랑이다. 심상정 후보는 금속연맹 출신의 3선 의원이고, 양경규 후보는 공공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장을 지냈다. 심상정 캠프는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양경규 캠프는 아시아나 승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인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전 위원장 등이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다.

두 후보의 주장에 차이가 느껴지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가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온 나라에 가득했던 1,700만 촛불의 희망은 어디로 갔”느냐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 후보는 자유한국당 같은 “수구세력”의 부활을 막고, 개혁을 견인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의석의 양적 성장(크고 강한 정당)이 사회적 임을 강조한다.

심 후보도 촛불 이후 개혁이 거의 이



정의당 대표 선거 양경규(왼쪽)·심상정(오른쪽) 후보

뤄지지 않은 것에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혁에 굽고, 특히 정의당과의 개혁 연대를 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개혁 의지 자체가 없음이 드러난 마당에 정의당과의 개혁 연대가 안 된 게 문제라는 지적은 문제를 잘못 짚었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지금까지 정의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와 배신을 충분히 비판하지 않았다.

게다가 심 후보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대안이 되기 위해 유능한 “경제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투자로 “새

로운 한국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 전략의 중요한 축은 확대재정과 수송·에너지·건설 분야의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이다. 이는 생태주의와 경제 활성화를 절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의당이 한국 자본주의를 진보적으로 성장시킬 방안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는 전망이다. (물론 기본소득 도입 같은 진보적 공약도 눈에 띈다.)

양경규 후보는 최근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에 저항”하며 “민주적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양경규 후보는 “이윤보다 인간을 말하는 노동은 …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한다. 동시에, “노동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와 결합하는 “무지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적녹보 연대).

정의당 안에서 정부와 체제에 대한 좌파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과감한 주장, 노동계 기반을 중시하는 덕분에 양경규 후보는 당내 좌파들의 지지를 받는 듯하다. 정의당원 주축의 좌파적 청년·대학생 모임인 ‘모네타’ 대표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정치위원장, 그리고 현직 노동운동가들이 양경규 후보 선본 출정식에 참석했다.

핵심 슬로건이 보여 주듯이 양경규 후보는 미국의 버니 샌더스, 영국의 제러미 코빈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은 듯하다. 샌더스와 코빈 모두 지난 몇 년간 노동계급의 변화 열망을 대변해 좌파적 대안을 주장하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지지하면서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양경규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을 폭로하고 노동자 투쟁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문재인은 수서고속철과 KTX 통합 약속 이행하라

최영준

문재인 정부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철도 통합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 말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담긴 ‘제3차 철도산업발전 계획’을 계승하려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연구 결과에 철도 통합에 우호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12월로 예정됐던 발표시기가 올해 3월로 연기됐고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다.

SR 통합을 약속했던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지난해 말에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에나 SR 통합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로 물러섰다.

올 5월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손병석은 “[노조가] SR 통합 이런 것으로 파업을 끌어내가기엔 국민 눈초리가 사나울 것”이라며 자신은 “통합보다 안전”을 챙기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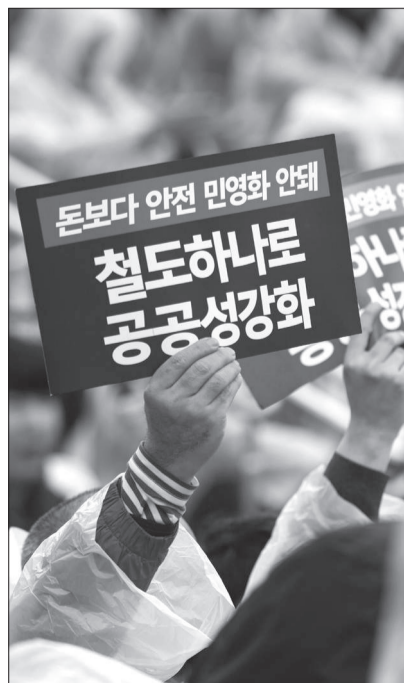
하지만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된 철도 시스템은 오히려 지난해 KTX 강릉선 탈선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 그래서 철도 통합은 안전과 직결된다.

한통속

문재인, 국토부장관, 철도공사 사장 손병석은 이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필요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지난해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촉구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적폐 관료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SR 분리를 고착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 탓에 보수 언론과 우파는 “철도 통합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통합 반대 목소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영화 안 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6월 28일 SR과 KTX 통합,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6월 29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김영익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올 예정이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그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도 따라다녔다. 6월 4일 영국 런던에서는 트럼프 방문에 항의해 수만 명이 행진했다. 그가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이기 때문이다.

6월 18일 트럼프는 다음주부터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줄곧 평범한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

트럼프의 집권은 세계 곳곳에서 우익 포퓰리스트와 나치를 고무했다. 그의 정책과 행동들이 미국 안팎에서 우익의 기를 살려 줬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를 전복하려는 베네수엘라 자본가들과 우파를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의 쿠데타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호전적인 제국주의자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위협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하며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이란을 위협했고, 대韓이란 제재를 재개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유조선 피격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위협 강화로 그 해협에 긴장이 높아지는 맥락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충돌들이 자주 벌어지면, 진짜 전쟁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트럼프의 공세 때문에 중동은 더한층 불안정한 곳이 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

그러나 진보 일각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트럼프의 방한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의 좋은 관계를 과시해 왔다.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까지 친히 공개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예컨대, 제재 완화)에 관해 말한 적이 없다. 늘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강조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실패하게 만든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있으며,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야금야금 진행하고 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에게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트럼프 방한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애쓰고 있다. 북유럽 순방 중에 문재인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의 제국주의 경쟁이 한반도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그 경쟁의 한 축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결코 평화에 기여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사드 정식 배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 등 중국 견제에 대한 협

력 강화를 한국에 요구해 왔는데, 이번 방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6월 말에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의 방한에 항의해야 한다.

민중공동행동은 6월 29일(토)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무기강매, 대북제재 강요, 평화위협 NO트럼프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6월 24일 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 위협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28일 이주 단체들이 ‘인종주의 반 이민정책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6월 29일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트럼프가 추진하거나 그가 대표하는 반동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이 “NO트럼프”를 외치며 한국에서도 트럼프를 환영하지 않음을 보여 주자.

참가합시다!

무기강매, 대북제재 강요, 평화위협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일시 : 6월 29일(토) 오후 3시

장소 : 광화문

주최 : 민중공동행동

7월 3일 파업에 나서는 학교비정규직

문재인은 최임 줬다뺏기, 교육청은 차별 해소 약속 먹튀

강철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월 3~5일에 전면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만 5117명은 78.5퍼센트가 정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89.4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노동자들을 우롱했다고 분노한다.

노동자들은 문재인이 임기 3년차인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6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노동자 100명은 청와대 앞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단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진보’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교직원 임금 8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쓸 돈은 없다고 말한다.

또, ‘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으니 이제 그만 요구하라’며 마치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4월부터 교섭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은 노동자 요구 외면 말라 2018년 11월 10일 서울 태평로에서 집회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임금·복지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는다. 강사 직종이라는 이유로,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익자 부담이라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소·야간 당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임금은 올리고 차별은 없애라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개악에 강하게 반발하자, 문

재인 정부는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기였다. 급식비와 교통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인당 연간 81만 4000원을 도둑맞았다.

시도교육청들도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부렸다. 2017년 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근속수당이 3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자 교육감들은 근속수당 인

상을 수용하는 대신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을 기존의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꾸라고 압박해서 결국 관철시켰다.

그 결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175만 원)보다 낮아졌다. 올해 조리사, 교육실무원들의 기본급은 167만 원에 불과하다. 사서, 영양사 등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들의 기본급은 180만 원을 겨우 넘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올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퍼센트 인상하고, 내년에는 최저

임금 인상을 이상으로 기본급을 올리라고 요구한다. 또, 근속수당을 현행 3만 25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속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라고 요구한다.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정규직인 교사와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인데다, 근속연수가 늘어도 수당이 늘지 않는다. 20년 상한선도 있어서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과 수당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강사 노동자들, 최근 간접고용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된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본급이 인상되고 수당이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사흘 파업을 결의하는 것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4월부터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불성실한 교육청들에게 우리가 선빵을 날리자”며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자고 호소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 민주노총 공공 비정규직 파업의 핵심 대열이 될 것이다. 이 파업이 승리하는 것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신정환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1명이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당진에 최근 현대제철이 들어서며 인구 유입이 늘어 우편 물량이 증가한 반면, 집배원은 전혀 증원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올해 들어 벌써 9명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집배원 191명이 숨졌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집배원 2000명 증원(올해 1000명 증원)을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우정본부는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우정노조(한국노총)와 올해 7월 1일부터 집배원 토요근무를 폐지

하겠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우정본부는 우편사업 적자 폭이 최대라며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연이은 집배원 사망에 책임이 있다. 청와대는 2017년 기획추진단 구성에 적극 관여했음에도, 우정본부가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구조조정을 종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간 쌓여 왔던 울분을 토해내며, 정부와 우정본부에 인력 증원과 토요근무 폐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정노조와 전국집배노조(민주노총)를 포함한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6월 24일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7월 6일 토요일부터 집배원 토요근무를 거부하고, 7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파업에 돌입한다면, 우정사업 역사상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이번 기회에 집배원 인력을 증원하고 토요근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 그리고 번번이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에 노동자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우정노조 집행부도 5월 23일 청와대 앞 전국 지부장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주에 걸쳐 전국 9개 지방본부 순회 집회를 벌였다. 매 집회마다 1000~2000명가량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서울과 경인 지역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연단에서 투쟁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크게 호응했다.

단결 정서의 확대

한편,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투쟁에 우정노조와 집배노조가 함께해야 한다는 정서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집배노조와 우정노조 노동자들이 아침 출근 홍보

전을 같이 진행한 곳들도 있다.

“파업을 앞두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 홍보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집배노조는 예전부터 우체국 앞에서 아침 선전전을 진행해 왔는데, 우정노조 지부장이 같이 해도 되겠냐고 물어 와서 좋다고 했습니다.”(안기선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장)

“홍보전을 같이 하면서 우정노조 조합원들도 우리[집배노조]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 전에 우리만 할 때는 눈치가 보여서인지 인사를 못 건네더라구요. 같이 하니까 서로 힘을 받습니다.”(이윤한 집배노조 경주우체국지부장)

우정노조가 집배노조에 비해 규모와 조직력이 월등하므로, 양 노조가 힘을 합치면 서로 고무 받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집배노조는 우정노조에 ‘총파업 승리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를 제안했고, 우정노조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정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집배원노동조건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간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 논의에서 보듯, 노동 개악 추진 기구로 활용돼 왔다.

이미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기획추진단이 여러 대책들을 권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기획추진단의 권고안에도 인력 증원 규모와 토요택배 폐지 등에서 부족함은 있다.)

진짜 문제는 인력 증원과 토요근무 폐지 약속을 정부와 우정본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만이 정부와 우정본부를 강제할 힘이 될 것이다.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운영위원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이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위기 교통 전가를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와 구조조정 대안을 둘러싼 논의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기업인, 정치인, 주류 언론들은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 같은 방식을 답습하면 미래가 어둡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고, 제조업 수익성이 2011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들의 성장세가 낮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하락한 것은 그들의 큰 시름거리다. 한국 경제가 첨단기술 산업 부문들로 전환한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를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경제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다. 나라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를 보면, 2005년 각각 6위와 17위이던 한국과 중국의 순위는 2015년 각각 5위와 3위로 역전됐다(유엔공업개발기구).¹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1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데, 1997년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2018년 통계청). 설비 투자는 제조업 전 분야에서 감소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한국은행 통계와 산업은행 전망치).

일명 '좀비기업'인 한계기업들도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상장기업의 7곳 중 1곳(14.8퍼센트)이 3년 연속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이 중 65퍼센트가 제조업에 속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대로, 금리가 매우 낮은데도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증가한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은 기존 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면서 한국 경제가 정체에 빠져들었음을 보여 준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엄청나게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해 왔다. GDP에서 총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도 내내 30~35퍼센트 수준을 유지했다. 이것은 영국(16.9), 미국(19.8), 독일(20.6), 일본(23.4) 등 선진국들보다 매우 높은 수

준이었고(2015년 기준, OECD 통계), 대중 소비의 억제(저임금)를 통해 유지됐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성장률은 선진국들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용어로 설명하면, 축적 수준이 너무 높은 나머지(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잉여를 추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 즉 이윤 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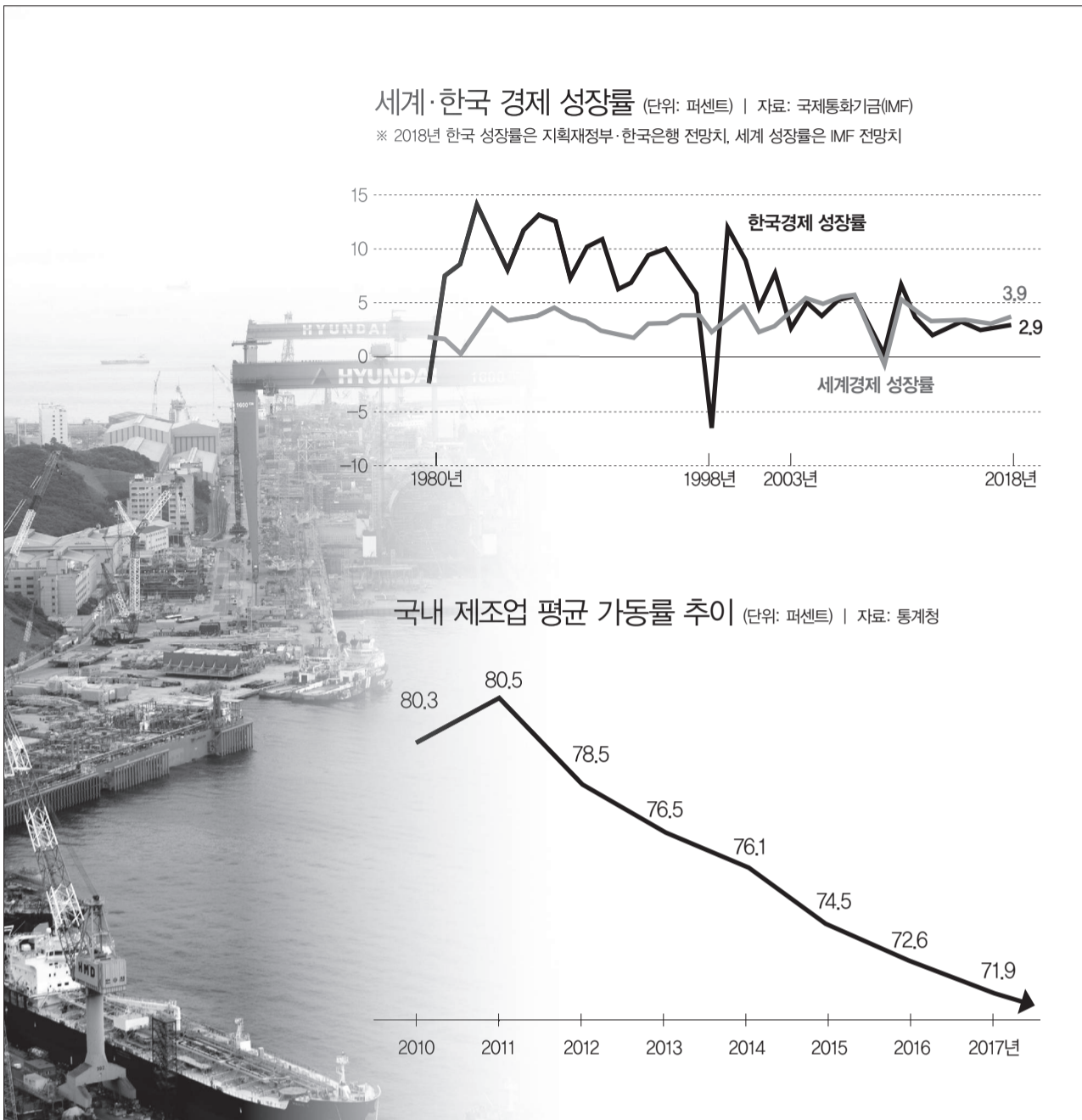
이에 더해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상황, 그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증대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경제는 소수 주력산업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수요가 줄면서, 한국 조선업이 입은 타격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의 주요 산업들은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의 둔화, 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뒤통에 빠진 체제, 정치 위기의 심화

이런 상황에서 너도나도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문한다.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사업 부문을 퇴출시키거나 개편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도태돼야 할 좀비 기업들을 계속 살려 주니까, 그것이 한국 경제 전체를 물괴신처럼 잡아 끄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해소해야 할 과잉 부문이 제조업에서만 무려 30퍼센트라는 주장도 있다.² 한국 경제의 효율과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고통스럽겠지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말이 쉽지,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연되고 있다,' '미흡하다,'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최근에 경제 상황의 악화 속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하고 있지만, 이것은 문제인 정부 들어 나타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김세직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당시 1997년 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구조조정이 없었다는 비판을 내놔다. 그렇게 구조개혁 없이 경기부양에만 의존한 결과 과잉 투자의 부작용이 성장률



Q. 용어설명

주력산업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8대 또는 10대 제조업을 가리킨다. 한국 경제는 주력산업 의존이 매우 심하다. 주력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퍼센트에 이른다.

총고정투자율

한 해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현재의 소비 대신 미래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부분.

사모펀드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펀드.

추락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³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계기업의 파산이 다른 기업에 이롭다'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설파했음지라도, 그들의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하에서도, 정부가 구조조정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이유다.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핵심 이유는 무엇보다 소수 대기업들이 산업과 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 특히 민주당 정부들은 벤처기업,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도도한 게 현실이었다.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도 한국에서 소수 대기업의 지배력이 점점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대기업이 파산하면 나머지 경제 전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기관들은 대우조선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면 경제에 끼칠 피해액이 무려 59조 원(금융위원회) 또는 17조 원(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 두려움에 떨면서 돈을 쏟아부어 살려 주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이른바 '대마불사'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거대화 때문에 경제 위기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이윤

율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구조조정은 또한 그것을 둘러싼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부른다. 부실과 과잉을 도려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반론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그 칼이 자신을 겨누면 애기는 확 달라진다. **자본과 국가의 유착** 때문에 구조조정을 둘러싼 분란은 정치 위기로 이어진다. 어떤 기업/산업을 살리고 어떤 기업/산업을 죽일 것인가, 어떤 방식과 속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인가, 그 비용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등을 둘러싸고 암투와 때때로 난타전이 벌어진다.

더구나 퇴출이든 부양이든 무엇을 선택해도 그것이 새로운 성장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다. 국가가 부양에 나서면, 세금 낭비인 데다 경제 전체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실제로 국가가 개별 자본의 손해를 떠안으면 결국 그 비용은 다른 곳(세금, 자본의 이윤, 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래서 위기에서 살아남은 자본들이 얻는 이득이 제한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계기업 퇴출이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경제 수축과 연쇄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한 국가의 정책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한진해운 파산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잘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다.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부실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8월 한진해운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은 물론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진해운을 퇴출시킨 해운업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의 북미항로 점유율이 절반으로 툭 떨어졌기 때문이다.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운 국제 해운사들에게 밀려, 북미항로 물량을 현대상선이 흡수하려던 야심찬 계획이 좌절된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를 추락케 한 심각한 정치 위기의 근원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심화와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놓여 있었다. 2016년에는 집권 세력 내부의 쟁투가 상호 폭로전을 부르면서 위기를 증폭시켰다.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 추진은 노동개혁 정책과도 맞물려 있었으므로 노동계급의 반감과 저항도 불렀다.

결국 촛불 저항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문제인 정부가 구조조정의 새 방안을 내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유에서 그것이 구조조정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래에서 이 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양효영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 수납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많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가 열악한 자회사 전환에 반대했다. 요금 수납원 6700명 중 약 2000명이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투쟁했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자회사 거부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자회사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6월 1일자로 톨게이트 영업소 31곳이 자회사로 전환돼, 전환 거부자 92명이 해고됐다. 16일자로 영업소 13곳에서 추가 해고가 벌어졌다. 7월 1일 모든 영업소가 자회사로 전환되고 요금수납원 2000여 명이 해고된다.

도로공사는 회유와 협박으로 자회사 거부 노동자들을 흔들고 있다. 한 노동자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부모와 남편까지 동원해 자회사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한 노동자는 자회사 전환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무인화) 도입으로 인원을 줄이려 합니다. 자회사로 가면 어차피 또 고용이 불안정해질 게 뻔합니다. 불법파견 판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 직접고용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동안, 도로공사 고위 관료들과 외주사 사장들(대체로 도로공사 고위 임원 퇴직자 출신)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배를 불려왔다.

최근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도 특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카페의 재료를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로공사 외주사 비리가 엄청 많습니다. 장애인 고용 수당을 타먹으려고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이쪽 회사에 보냈다가 저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돌려쓰기도 했죠.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은 3교대 하면서 최저시급 받았습시다. 그런 꼴을 더 보고 싶지 않아서 직접 고용하라는 겁니다.”

6월 19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설움을 쏟아냈다. 어떤 영업소에서는 요금 수납원에게 설사가 아니면 화장실을 가지마라,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하니 부스에 물을 들고 가지마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험도 많았다. 하청 사장이 술자리에 여성 노동자를 접대부인양 데려가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싶지 않

으면 삭히고 참아야만 했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길 바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도로공사의 자회사 꼼수를 승인해주며 대량 해고를 방조하고 있다. 이라고도 ‘일자리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19일 집회 연단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터뜨렸다.

“우리를 해고한 건 이 나라입니다. 저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노동자입니다. 수납원 대량해고가 벌어진다면 이강래 사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박순향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장)

6월 12일 청와대 앞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집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발언해 큰 호응을 얻었다. 민주노총은 절박한 노동자들의 염원에 부응해 연대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면 도발하는 상황에서 정면으로 맞선 투쟁이 더욱 절실하다.

‘스마트톨링’ 도입이 노동자 일자리보다 우선?

도로공사 측이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는 것은 인력 감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스마트톨링)을 확대하려 한다. 스마트톨링이란 기존 요금 수납소를 없애고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판독한 후, 차량 이동 동선을 파악해 요금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단말기가 없어도 된다는 점에서 하이패스와 다르다.

그러나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왜 미래에 도입될 스마트톨링에 대비해 지금 고용불안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자동화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은근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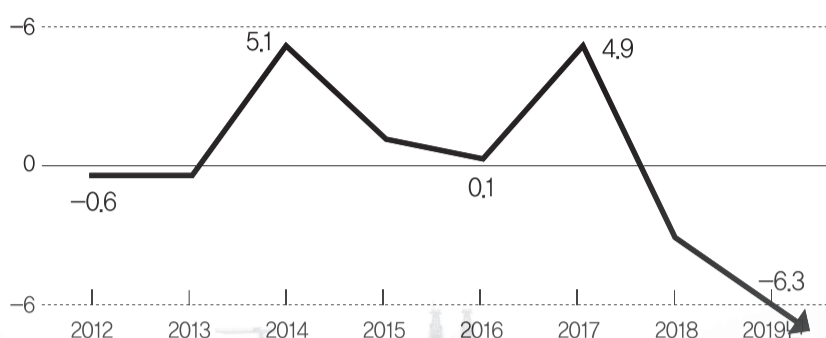
게다가 영상 카메라의 차량 번호판 인식률이 100퍼센트가 안 된다. 영상 카메라 오작동으로 실제 통행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걷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개인의 차량 동선과 기록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요금 고지서 발송과 차량 동선 조회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현재 스마트톨링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즉,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스마트톨링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요금 수납원이 꼭 필요하다.

설사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해도, 그것의 도입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당장 직접고용의 책임을 져야 하고, 스마트톨링 도입 계획을 노동자들의 일 자리를 위협하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퍼센트) | 자료: 산업은행



문재인 정부 ‘새’ 구조조정 방안의 모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문제였다면서, 산업적 관점을 고려한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2017년 12월 발표). 존속가치가 높으나 청산가치가 높으나 따지면, 산업의 장래에 대한 판단 없이 기업을 죽이거나 살려,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새롭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시장 중심 구조조정’은 이미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것으로, 자본시장을 활용한 인수합병 등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2016년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요건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 버는 자본을 활용하는 구조조정이 도대체 채권단보다 뭐가 더 나은가?

‘산업적 관점’이라는 것도 일각의 기대와 달리 결코 진보적인 내용이 못 된다.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방안이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희생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공급능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조선업 발전전략>(2018. 4)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에 대해 “현장직 70퍼센트를 해고하는 조건으로 존속”시키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2018. 3)을 제시했다.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측에 매각(민영화)하는 방침을 결정(2019. 1)했고, “공급물량 축소와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이미 2014~2017년 동안 조선업 인력 규모가 20만 명에서 11만 명

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도 말이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시간 끌다가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분노한 것은 당연했다.

이런 ‘새’ 구조조정 방안은 문재인 정부 자신이 표방하는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도 정면 배치된다. J노믹스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라더니 대우조선선을 민영화(매각)하는 것이나, 재벌 독식을 막고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더니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내수 진작으로 (수출 의존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나, 인력을 감축하고 임금을 삭감해 도리어 수요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또 다른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새 구조조정 방안은 결코 “포용적 성장”(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 논리” 대신 “산업적 관점”을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일정한 진보이고 협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이 점은 2008년 위기 이후 국제 좌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당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고 개입하자 일부 좌파들은 케인스주의와 복지 정책의 부활이라고 보면서 반겼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음이 곧 드러났다. 각국 정부들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비용을 장기적인 복지지출 삭감(긴축)으로, 즉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서 매우려 했다. 크리스 하먼이 지적했듯이, ‘새 케인스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에 있었고 자본을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도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본의 거대화 등 위에서 살

펴본 문제들 때문에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본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편이 어렵사리 진행될 텐데, 그로부터 득을 얻는 것은 결국 대기업들일 것이다. ‘대마’와 달리 경제 위기 속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에 내몰리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기업들이 제한적이나마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본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 자리를 없애고 임금 삭감 같은 조건 악화를 강요함으로써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조선업 자구 노력 등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 합병에도 이런 노력이 뒤따를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투쟁하지 않고는 생활수준을 지킬 수 없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상당 기간 대단한 투쟁을 벌이지 않고도 그럭저럭 소득을 거둬 왔다. 그런 결과와 마치 ‘특권층’이나 되는 양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 일부는 구조조정에 직면해 투쟁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떠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내세운 조건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가?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참고 견디는 것 말고 대안이 있는가? 다음 호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현 대경제연구원(2018. 4. 6)
2. 유병규, 세 가지 산업구조조정 추진 하라, 서울경제(2017. 5. 9)
3. 김세직, ‘한국경제: 성장위기와 구조개혁’(2016)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200만 명이 법안 폐기와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하다

김영익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이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15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의 분노와 100만 명이 참가한 대중 투쟁 때문에 잠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캐리 램은 법안의 철회는 없을 것이라며 송환법 개정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시위대를 향한 홍콩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옹호했다.

홍콩의 진보 세력은 법안 추진 중단이 홍콩 정부의 시간 벌기를 책략이라고 본다. 중국의 홍콩 당국은 투쟁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법안을 다시 추진하려 할 것이다.

캐리 램의 기자회견은 시위대의 분노를 더 자극했다. 그다음 날인 6월 16일 무려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법 개정의 일시 중단이 아니라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다. 200만 명은 홍콩 인구 전체의 거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제 시위대는 송환법 개정을 추진해 온 캐리 램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권좌를 지키는 한 송환법 개정 문제가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캐리 램과 홍콩 당국은 여전히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송환법 반대 시위를 ‘폭동’이라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다. 시위 지도부 구실을 해 온 공동전선인 민간인권연합은 주요 요구들이 성취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산 운동

1997년 중국 반환 후, 시간이 갈수록 영국 식민지 시절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홍콩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커져 왔다. 베이징과 결탁한 소수 지



6월 16일 홍콩 200만 시위 투쟁의 기세가 강해서 홍콩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했다

배자들이 홍콩의 경제와 정치를 주름잡았지만,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는 20여 년 동안 계속 심해졌다.

2014년 우산 운동은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된 계기였다. 그러나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운동은 패배했다. 그 후 중국 정부는 홍콩 진보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감시를 강화했다. 행정장관 캐리 램이 송환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송환법이 개정되면, 당장 위협에 처할 사람들이 있다. 홍콩에서 중국공산당을 비판한 사람, 매년 6월 첼런먼 항쟁 기념 집회를 조직한 사람, 중국의 반정부 인사를 도와 준 사람, 중국 노동운동가를 지원한 사람 등등. 이들은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해 한’ 사람으로 간주돼 중국으로 소환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낼 수 없는 서적이 홍콩에서 출판돼 중국으로 들어가는 등 홍콩은 중국에 각종 저항 소식을 전파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중심지이다.

따라서 송환법 개정 시도는 홍콩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인 동시에

예, 중국 내 노동운동들을 비롯한 저항을 겨냥한 조치였다.

첼런먼

이번 송환법 반대 투쟁은 홍콩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계기였다. 6월 9일 1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한 데 이어, 12일에는 시위대 4만여 명이 입법회(의회) 건물과 정부 청사를 에워싸고 법안 심의를 저지했다.

물론 홍콩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했다. 고무탄, 최루액, 물대포 등을 동원한 공격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러나 투쟁의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질 조짐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6월 16일 시위에 참가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실제로 그렇게 됐다.) 특히, 노동자 파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수많은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자고 소속 노조에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홍콩노총(HKCTU)은 6월 12일에 이어 17일에도 파업을 하기로 했다.

결국 거대한 대중 투쟁 때문에 송환

법 개정을 지지하는 홍콩 지배계급 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친중 성향의 입법회 의원들이 송환법 처리 연기를 행정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중국 지배자들도 홍콩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이 중국 내 노동자 투쟁에 미칠 영향을 염려했다. 이런 상황 때문이라도 캐리 램은 법안을 7월까지 일시천리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송환법 개정 추진 중단은 거대한 대중 투쟁이 거둔 명백한 성과다. 물론 일시적인 성과인 듯하다. 법안을 완전히 철회시킬 때까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의 단체행동과 결합해야 한다. 2013년 40일간의 항만 노동자 파업 등에서 홍콩 노동자 투쟁은 가능성을 보여 왔다.

그리고 중국 본토 노동계급과의 연대가 홍콩의 투쟁에 결정적일 수 있다. 바로 중국 노동계급에 중국 지배자들과 그 체제를 위협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노동계급이라는 거인이 정치적이 될 때에야 중국과 홍콩의 민주주의의 문제로 해결될 길이 열릴 것이다.



서방 제국주의의 영향력에 맞서 홍콩과 중국 바깥의 좌파는 홍콩의 투쟁과 민주주의에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국주의·친제국주의 언론에 반대해 진정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의를 옹호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김영익

송환법과 그에 항의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난다.

중국 정부는 “(중국 특색의)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정작 노동 대중이 자기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출할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2014년 홍콩인들이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우산 운동)를 벌였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강경하게 탄압했다.

중국은 우산 운동 탄압에 앞장선 자를 간접선거로 홍콩 행정장관에 임명했다. 그 자가 바로 지금의 행정장관 캐리 램(62, 여성)이다.

흔히들 홍콩 송환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친중 대 반중’ 갈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홍콩에서 중국 정부의 든든한 동맹 구실을 하는 자들은 바로 자본가 계급이다. 반면 홍콩 노동자들은 송환법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투쟁이 분출하자 중국 정부는 그 소식이 중국 안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다. 인터넷, 방송, 신문에서 중국 인민이 홍콩 시위 소식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정치적·시민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권리와 민주주의가 없는 중국을 두고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를 그저 관료적 지령 경제나 국유화 경제 따위로 생각한다면, 사회주의는 인간 해방과는 아

무 관계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이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으로 이해했다. 노동계급이 기존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노동자 평의회 형태로 된 노동자 국가를 세워, 모든 의사결정이 노동자들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장악했기 때문에, 드물지만 때로 국가기구를 직접 통제하지 않아도 지배계급일 수 있다. 반면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 국가를 세워 그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마르크스)가 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국가 하에서 시민적·정치적 자유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보다 훨씬 신장돼야지 억압돼선 안 된다.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는 가짜다.

1949년에 건국된 중국은 처음부터 노동자들이 아니라 농민 게릴라 출신인 지식인들이 새로운 국가를 장악하고 통제했다. 마오쩌둥이 이끈 중국 혁명은 도시 출신 지식인들이 지휘한 농민 군대가 친제국주의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지주 중심의 옛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일본과 서방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한 민족해방 혁명이었다.

그렇지만 이 혁명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다. 혁명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은 도시로 진격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제 자리를 지키며 일

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중국공산당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를 지배하게 됐다. 곧 그들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 속에서 살아남고 미국·대만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즉, 자본 축적)의 속도를 높여야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1957년에 마오쩌둥은 “15년 또는 조금 더 많은 시간 안에 영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내놔다. 이듬해에는 “7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당·국가 관료들은 빈약한 자원으로 공업 기반을 건설하기 위해 대중의 생활상의 필요를 자본 축적이라는 지상 과제로 체계적으로 종속시켰다. 서방과의 경쟁 압력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착취율을 극단적으로 높여야 했다. 그렇게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면서 지배 관료들은 노동자·농민과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

자본 축적과 대중의 필요 사이의 모순 때문에 중국은 처음부터 보안경찰에서 총력의 하급 관리들에 이르는 강력한 국가 통제 체계를 확립해야 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모두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노동자들은 언론의 자유나,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조금치도 보장받지 못했다. 중국의 노동조합은 국가 통제 하에 생산 목표를 협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했다.

결국 중국 사회는 본질 면에서 서방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는 자본주의의 변형태인 사회일 뿐이다. 물론 형태면에서는 서방의 시장 자본주의와는 다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이지만 말

다,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은 오늘날 중국에서 기업들이 국유화 부분과 큰 적대 없이 공존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제국주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제국주의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중국을 제국주의의 일부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19세기 중국은 영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의 대포 앞에서 굴복해야 했다. 중국은 엄청난 굴욕을 당하면서 홍콩을 영국에 내줘야 했다.

그러나 1949년 이후의 중국은 서방 열강에 일반적으로 침략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로 비약했다. 국경을 넘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곳곳에 지정학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때때로 전쟁을 벌였다.

특히, 중국은 처음부터 소수민족을 혹독하게 억압하는 한족 제국주의 국가였다. 중국공산당은 소수민족에 대한 자치권 보장 약속을 뒤집고 티베트, 아레로부터의 저항을 모두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노동자들은 언론의 자유나,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조금치도 보장받지 못했다. 중국의 노동조합은 국가 통제 하에 생산 목표를 협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했다.

결국 중국 사회는 본질 면에서 서방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는 자본주의의 변형태인 사회일 뿐이다. 물론 형태면에서는 서방의 시장 자본주의와는 다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이지만 말



송환법은 억울한 희생자를 낳을 악법이다

국으로도 떠올랐다. 중국의 자본 축적 과정이 진정으로 세계적 과정이 되면서, 중국 지배 관료들의 전략적 사고도 변했다.

중국 지배 관료들은 중국의 해외자산 보호,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대양해군 육성 등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국방백서에 “해의 이익 수호”를 명시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또한 중국 관료들은 아프리카 정부들에 돈과 무기를 지원하고, 유엔평화유지군 깃발 아래 곳곳에 군대를 파견하며, 상하이협력기구 SCO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등을 주도한다.

이 모든 게 중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데서 비롯한 변화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서유럽 국가 등 기존 열강과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기존의 세계 제국주의 구도를 흔들고 있고 제국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 1·2·3위의 경제 대국들(미국, 중국, 일본)이 바로 동아시아에서 고전적 형태의 영토 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경쟁과 무력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걸 제국주의의 경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국주의라

할 수 있을까? (제국주의는 열강이 서로 경제적·군사적 각축전을 벌이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세기에 홍콩을 영국 제국에 내주던 중국은 20세기 초중에는 서구 열강의 반(半)식민지로 전락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였다. 그러나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영국에게서 물려받은 중국이 홍콩에 틀인 군대는 의기양양한 점령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중국 지배관료들은 홍콩 자본가들과 손잡고 20년 동안 홍콩을 더욱더 시장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시장 친화적 ‘개혁’ 속에 악화될 빈부격차, 그 시장 친화적 ‘개혁’ 과정을 후원한 연필집 ‘사회주의’ 중국 국가를 보면서 많은 홍콩인들이 분노와 불만을 삭여 왔다. 홍콩 시민의 20퍼센트가 빈곤선 아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지경이다.

따라서 오늘날 홍콩 대중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이유를 알려면 ‘사회주의’라고 열토당토않게 불리는 중국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시장을 대폭 수용한 국가자본주의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더 무리없이 부르지만 말이다.

홍콩 시위는 “서방과 결탁한 음모”인가?

중국 정부는 홍콩 송환법 반대 투쟁이 “서방과 결탁한 음모”라고 중상·모략했다. 중국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려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홍콩의 운동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이런 주장으로 송환법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흠집을 내고 중국 노동자 운동과 홍콩 투쟁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싶어 한다.

물론 홍콩의 온건한 법민주파 정당들의 일부가 미국민주주의기금(NED)의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당들은 송환법 반대 투쟁을 이끌지 못했다. 법민주파 정당들은 너무 온건해서 거리의 시위대에게 신뢰받지 못했다.

주요 집회와 행진을 이끈 것은 민간 인권연합이다. 이 연합체에 가입돼 있는 단체 50여 곳은 대부분 NGO와 조차

무엇보다, 운동의 기층 참가자 압도 다수는 트럼프나 폼페이오 따위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오히려 2년여 앞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한국의 박근혜 퇴진 운동에 더 관심이 있다고 공언한다.

대다수 좌파들이 홍콩 송환법 반대 투쟁에 침묵하고 있다. 지지하기를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아마도 송환법 반대 투쟁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운동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을 판단할 때 그 온건파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요 잣대로 삼

는다면, 한국의 1987년 6월항쟁이나 2017년 박근혜 퇴진 운동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못 벗어났으니 좌파가 지지할 필요가 없는 운동으로 취급될 것이다. 한국의 좌파는 이런 황당한 종파주의는 삼갔지만, 2004년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는 운동이나 2008년 광우병 위험 쇠퇴기 수입 반대 운동에도 성심껏 참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를 비롯한 서방 지배자들은 위선적이게도 홍콩 시위를 이용해 중상 회박한 것이다. 갈수록 침예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서방의 간섭은 홍콩 대중 운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려 애쓰는 시도임이 명백하다.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다

차승일

대부분의 좌파들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투쟁을 지지하기를 사실상 회피하는 것이다. 아예 중국 관영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번역해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

이런 호의 다른 기사에서 김영익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런 태도는 홍콩 운동의 일부 온건파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만을 잣대로 운동의 성격을 평가하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한다.

그런 좌파의 일부는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하면서도 중국을 모종의 사회주의 사회로 본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 경제의 핵심 부분이 여

전히 국유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마르크스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관점이다. 마르크스는 《철학의 비판》을 써서, 자본주의를 사유재산 제도도, 또 사회주의를 국유화로 정의한 아나키스트 프롤들을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사회주의는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수동적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사회주의의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새 사회의 씨앗은 오로지 옛 사회에 대항한 투쟁 속에서만 뿌러질 수 있다. 노동자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래로부터의 능동적 투쟁뿐이다. 아래로부터 투쟁은 위로부터 통제될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64년 작성한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네셔널) 규약을 이런 구절로 시작했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위이다.” 이 노동계급 자력해방의 원칙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착취적 사회가 사회구성의 모든를, 즉 착취자뿐 아니라 피착취자도 타락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옳으로 뒤엎는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자력으로 해방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변한다고 지적했다.

“혁명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른 방법될 수 있는 방법은 아래로부터의 능동적 투쟁뿐이다. 아래로부터 투쟁은 위로부터 통제될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민주주의였다. 마르크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원이 자신을 사회주의로 이끌었다고 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71년 파리 노동자들이 세운 파리 코뮌에 열광했다.

파리 코뮌은 현대의 그 어떤 의회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경찰, 교육·과학·산업·금융 부서 등이 노동 대중에게 책임졌고 소환될 수 있었다.

당시 파리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았다. 대표자들은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았고 특권이나 추가 보수를 누리지 않았다. 선출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환됐다. 이 방식 때문에 대표자는 유권자와 멀어질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생겨난 노동자 소비에트(평의회)와 병사 소비에트 등 민중의 민주적 권력 기구나 그렇게 발전할 잠재력이 있었던 기구들은

모두 이런 철저한 민주주의적 특징을 보였다.

산업·금융·법·군대가 전혀 선출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소수의 수중에 남아 있다면,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그런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요소는 결국 부패해 사라지기 마련이다.

민중의 지배라는 말뜻대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민중의 다수이고 생산자인 노동자가 스스로 해방해야 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계급 지배 탓에 막대한 있던 모든 사회영역을 민주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미국 버니 샌더스 등의 부상으로 좌파 내에서 떠오른 “민주적 사회주의”와 혼동하면 안 된다. 물론 자본가 정당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배해 온 미국 정치에서 샌더스의 부상은 반가운 발전이지만 말이다.

“민주적 사회주의” 주장은 여러 버전이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사회주의를 국유화로 이해하며, 이런 뜻의 ‘사회주의’ 앞에 붙은 수식어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의회 민주주의

가 정착된 나라에서 개혁주의적인 노동자 정당이 의회를 통해 집권해 생산수단과 시장의 일정한 정부 규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민주주의 비전은 이보다 훨씬 심대한 것이었다. 위계적이고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민중의 다수인 노동자 대중이 자신의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제하고 대표자들은 그에 따라 행동하는 민주주의로, 즉 노동자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스스로의 투쟁으로 이룩하는 자력 해방, 그런 해방에 뒤따르는 민중의 지배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요소가 사회주의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없으면 사회주의는 죽는다.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고는 하는 모든 요소—예를 들어 국유화나 계획경제—는 위의 두 가지 요소에 건전 훨씬 부차적이다. 노동자들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위해 계획되는 사회주의 경제란 있을 수 없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알렉스 캘리니코스, ‘신자유주의의 대안’, 《맞불》 40호.

2020년 미국 대선

트럼프에 맞선 샌더스 발 ‘민주적 사회주의’ 열풍

김준효

6월 1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에 맞서 민주당 주류가 내세운 후보는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 조셉 바이든이다. 바이든은 당 지도부와 기성 언론에게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몇몇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린다. 적잖은 자본가들도 바이든을 지지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사이에서 바이든 지지는 트럼프 지지보다 높다.

바이든은 미국의 코소보 침공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2003년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호전적 제국주의자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발전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강경 친기업 인사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 열풍은 반(反)트럼프 열망의 구심이 돼 있다. 최근 보수 언론인 〈폭스〉의 여론조사에서조차 샌더스는 트럼프를 9퍼센트포인트 차로 앞섰다. 대선 출마 선언자 중에서 트럼프와 격차를 가장 크게 벌린 것이다.

샌더스는 지배 엘리트를 강경하게 비판하고 “정치 혁명”을 호소해 인기를 끌고 있다. 6월 12일 샌더스는 이렇게 연설했다. “오늘날 한 줌도 안 되는 억만장자들이 전혀 없는 부와 권력을 누린다. 이들은 어떤 민주적 감시도 받지 않고, 납세자의 주머니를 털어 보조금을 챙기기 일쑤며, 권력을 휘둘러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 ... 수많은 대중이 분명히 일어나 기업·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도전하는 ‘정치 혁명’만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샌더스는 다양한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전국민 단일의료체계 확립, 무상 대학교육,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임금 성취, 값 싸고 질 좋은 주택 제공, 기업의 환경오염 강력 규제 등[은] ... 21세기판 경제적 권리장전이다. 경제적 권리는 기본권이다. 그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대규모 사회 개혁과 복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정부 투자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골자였던 1930년대 뉴딜과 구분된다.

샌더스 열풍의 배경에는 끔찍한 양극화와 가난이 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초로 이전 세대보다 기대 수명이 낮고, 실질 소득도 턱없이 낮다. 공식 통계로도 약 4000만 명이 빈곤층이고 노숙자가 50만 명을 넘는다. 반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3명의 재산이 하위 50퍼센트 전체가 가진 재산과 맞먹는다.

샌더스는 이에 대한 **계급적 분노**를 대변했다. 2016년에 샌더스는 ‘점거하라’ 운동의 구호인 “1퍼센트 대 99퍼센트”를 차용해 많은 미국인들의 변화 염원을 표현했다. 당시 샌더스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거대 통신기업 버라이즌 노동자 파업을 지지했다.

그 후 3년 동안 미국에서는 여러 중요한 **대중 운동**이 성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성차별·인종차별에 맞서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규모의 대중 시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 오랫동안 침체한 미국 노동운동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2018년 미국에서는 32년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가 파업에 나섰다. 특히 교사들이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며 투쟁을 주도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샌더스는 2016년에 이어 지금도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주의

샌더스 열풍으로 미국 공식 정치에서 사회주의가 의제로 부상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인 열 명 중 네 명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여성(48퍼센트), 유색인종(57퍼센트), 청년(18~34세, 58퍼센트) 사이에서 특히 지지가 크다. 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미국민주사회주의당(DSA)이 3년 만에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체제 변혁적 사회주의는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접수해 위로부터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핵심 기치로 삼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때로 샌더스는 우려했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샌더스는 국경을 이주민에게 온전히 개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민주사회주의당(DSA) 소속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대규모 개혁 정책 ‘그린 뉴딜’ 법안도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 제국주의(‘안보’) 문제도 샌더스의 약점이다. 샌더스는 미국의 핵무장과 F-35 전투기 개발을 지지한다. (반핵·반전 운동의 지도자였던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샌더스는 중국을 미국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고 중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트럼프와 같은 입장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쯤에서 샌더스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밝힌 유진 뎀스의 행보를 돌아봐야 한다. 뎀스는 19세기 말 미국 최초의 전국 철도 파업을 이끌었고, 이 파업 때문에 감옥에 갇힌 뒤부터 사회주의자를 자처했다.

일관된 노동운동·반제국주의 투사였던 뎀스는 1900~1920년 동안 다섯 번 대선에 도전했는데, 그중 한 번은 제1차세계대전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출마했다. (이 선거에서 얻은 표가 가장 많기도 했다.) 뎀스가 창설에 참여한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은 대규모 파업을 승리로 이끈 전투적 노동운동 단체였고, 뎀스가 창당한 미국 사회당은 미국 양당 정치가 직면한 가장 큰 좌파적 도전이었다.

샌더스 열풍의 진정한 동력인 분노와 변화 염원을 잘 모으려면 뎀스와 같은 독립적·좌파적 도전이 필요할 것이다. 2016년에 샌더스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호전적 제국주의자이자 지배계급의 전사인 힐러리를 지지하라고 호소해 실망을 산 바 있다.

미국 좌파들은 샌더스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사회주의 열풍과 깊이 관계를 맺으면서도 진정한 사회주의 정치(와 조직)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수많은 대중이 분명히 일어나 도전해야” 미국인 43퍼센트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민주사회주의당, 왜 성장했나?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좌파들도 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미국민주사회주의당(DSA)의 성장에 주목한다.

DSA는 샌더스가 가난과 양극화에 대한 계급적 분노를 대변한 데서 큰 수혜를 입었다. DSA는 샌더스 선거 운동에 흠뻑 동참해 좌파적 목소리를 내고, 지역 운동에 몰두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계급투쟁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DSA는 3년 만에 약 6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를 보며 많은 미국 좌파들은 (유진 뎀스 이후 오랜 과제였던) 대중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창당을 기대한다.

DSA는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샌더스 등)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청중을 얻고, 자신들이 미는 의원을 당선시켜 입법 활동과 정치 논쟁으로 이목을 끌려고 한다. 미국 좌파 언론 〈자코뱅〉편집자 바스카 순가라는 이를 “선거의 힘을 활용해 노동계급의 힘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그런 전략 하에서 DSA는 샌더스 대선 선거운동에 적극 참가했고,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 당원들을 민주당이

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시켰다. DSA는 민주당 지도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배출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대표적 사례다.

이 과정에서 DSA는 미국 곳곳에서 노동운동·사회운동과 관계를 맺고, 샌더스 지지로 모인 젊고 좌파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었다. 그러면서 DSA 안에서는 민주당을 견인하거나, 언젠가 민주당에서 독립해 좌파적 정당을 세운다는 생각(소위 “더티 브레이크”)이 함께 자라났다.

DSA는 이 전략으로 단기간에 몸집을 크게 불렀지만, 현실에서 DSA의 실천은 진보 청중들에게 민주당 가입을 촉구하고, 민주당 선거 운동과 의정 활동에 깊이 관계 맺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SA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최소한 일부)을 견인하겠다는 생각이졌지만, 거대한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을 소규모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견인하기란 지금처럼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강력한 견인 압력에 시달린 쪽은 DSA였다. 이미 2018년 중간선거 당시 DSA는 몇몇 지부들이 친제국

주의적 정치 행보를 걸었던 민주당 주류 인사들의 선거 운동을 지지하면서 커다란 내부 논쟁을 겪었다. DSA 간판 스타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을 키우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흑인 공민권 운동의 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가 1980년대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두 차례 도전했을 때도 비슷한 동학이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민권 운동의 동력을 민주당에 대한 투표로 제약하려 했고, 당시 잭슨은 아래로부터 운동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탓에 이에 끌려가 버렸다.

20세기 미국 사회주의자 헬 드레이퍼는 선거에서 당선해 노동계급을 위한 개혁을 한다는 “위로부터 사회주의” 전략으로는 체제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고 외려 체제에 용해되기 일쑤라고 지적한 바 있다.

DSA의 핵심 성장 동력은 그저 의회를 영리하게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계급적 변화 염원과 저항에 접속했기** 때문이다. 한국 좌파들이 배울 교훈도 여기에 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기각 사태를 계기로 보다 이혼의 자유 억압하는 유책주의

양효영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혼외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또다시 유책주의를 고수했다.

2015년 간통죄 폐지는 대중의 의식 변화를 매우 뒤늦게야 반영한 것인데, 그 뒤에도 유책주의가 남아 여전히 성인 남녀 이혼 자유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이혼은 개인의 온전한 선택이 돼야 한다. 그 이유가 성격 차이이든, 경제적 문제든, 애정이 식은 것이든 더는 혼인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관계 유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유책주의는 이미 깨진 혼인 관계를 껌데기만 유지하게 한다. 예컨대 시부모와의 갈등, 경제 사정 때문에 가출해 28년 동안 별거한 여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불허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유책주의에 반대한 대법관들은 혼인 관계가 실제로 깨졌다면 이혼을 허가하



이미 파탄 난 결혼 관계를 껌데기만 유지하게 하는 유책주의

는 ‘파탄주의’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책주의는 흔히 당사자들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든다. 법정에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적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유책주의가 또한 ‘너 이 새끼(여편네) 한 번 당해 봐라’ 하는 복수심이나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유책주의가 여성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침이라고 주장한다. ‘바람 파운’ 남성 배우자 때문에 여성이 경제적 곤궁에 빠지는 “축출 이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페미니스트 일각에서는 홍상수 씨의 이혼 소송을 굽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가령 정희진 씨는 홍상수-김민희 관계에 대해 “불같은 사랑”이라고 해서 책임과 윤리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물론 이혼 후 생활수준이 하락하거나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다. 그러나 이혼을 어렵게 해서, 여성에게 불행한 결혼을 유지하며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해 살라고 하는 게 대안일 수는 없다.

양육 부담을 개별 가정의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근본 문제이지만, 경제적 곤궁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적 문제이므로 해결책이 개인들에게 떠넘겨져서도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남성 개개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동계급 남성들도 많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비용이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유책주의가 여성에게 훨씬 억압적이고 가혹하다는 점도 봐야 한다. 성과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져 왔고, 여성이 이른바 ‘유책’ 당사자인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혼외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여전

히 남성보다 훨씬 더 비난받는다. 남성의 혼외 성관계는 한 번쯤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여성은 그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 성도덕이 여전히 존재한다. 배우 김민희 씨가 ‘불륜을 저지른 여성’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만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유책주의가 수호하려는 일부일처 가족제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억압적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부일처 가족제도는 여성 차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력 재생산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면서 보육·복지에 투자해야 할 책임을 덜어 왔다. 이 때문에 노동계급 여성은 양육과 가사에 시달려야 하고, 경력 단절이나 저질 일자리를 감수해야 한다. 남성 노동자들은 부양 책임 때문에 (전보다) 더 오래 휴사당한다.

유책주의는 이런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성적 보수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유책주의는 파탄주의로 바뀌어야 하고, 온전한 이혼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혼과 성적 자유를 위한 투쟁은 이를 가로막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러시아 혁명 직후 노동자 정부는 (다른 여성 해방 조치들과 함께) 누구든지 원하면 이혼이 가능하도록 했다(한쪽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했다). 이는 노동계급의 혁명이 진정한 여성·성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힘껏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일당의 위험천만한 대(對)이란 전쟁몰이 반대한다

이원웅

중동이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6월 13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 오만 해에서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당한 사건을 구실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미국은 병력 1000명을 중동으로 추가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란은 27일부터 핵협정이 정한 한계보다 더 많은 우라늄을 비축하겠다고 반발했다. 핵협정에서 합의한 것보다 더 높게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핵협정을 먼저 내다 버린 쪽은 지난해 이란 제재를 재개한 트럼프다!)

미심쩍은 증거

6월 13일 유조선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매우 미심쩍다.

14일 미국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신뢰성이 의심받자 17일 미국은 사진을 몇 장 더 공개했다. 하지만 그 사진과 영상도 의심을 풀어 주지 못한다. 미국은 이란혁명수비대가 유조선에 불

은 불발한 기뢰를 제거하는 모습을 찍었다고 했다. 그러나 유조선이 피격한 지 거의 12시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나 미군이 뻥히 보는 앞에서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하기는 어렵다.

공격당한 유조선을 소유한 일본 회사도 기뢰 공격 주장을 반박했다. “두 번째 공격을 받을 때 여러 선원이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증언을 무시한 채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몰아붙이며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미국의 핵심 우방들도 입을 모아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옳게도 “믿을 만한 증거 없는 영국 정부의 수사는 전쟁 위험만 키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며 전쟁을 일으켰던 전

력이 허다하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며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현재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볼턴은 당시 침공을 적극 옹호했던 자다.

옳게도,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는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군사 개입을 늘린 명분이 된 ‘통킹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젊음은 5만 9000명이 전쟁터에 나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돌아온 후에도 죽거나 자살하거나 … 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거짓을 근거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조선 피격의 정치적 맥락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이란 압박이 증대되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핵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는 지난해 이를 실행했고, 이란을 강력하게 제재했다. 5월에는 이란 부근에 항모전단을 보내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도 이란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들을 지원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란은 이에 반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달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네 척이 공격당하고 미국이 병력 1500명을 증파했다.

이번 사건 때 미국은 사고 해역(이란의 코앞이다)으로 구축함을 보냈다. 미국의 군사력 전진 배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더한층 불안하게 한다.

이곳에 군사력 투입이 늘어나고,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 우발적일지라도 공격을 받는다면, 상황은 견잡을 수 없이 악화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 지배자들 내에는 ‘이라크 악몽’ 때문에 중동에서 다시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자들이 적잖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최종 패배했다. 그 과정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중동 상황은 미국에게 골칫거리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국들, 특히 중국에 대처하는 데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전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말도 동시에 하는 것은 미국 지배계급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패권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는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패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아주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중동이 이미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지역 강국들의 갈등, 온갖 집단들의 반란과 충돌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협정 준수를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도 더 격렬해질 것이다. 그만큼 미국의 중동 통제력도 심각하게 도전받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해 그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하는 중요한 까닭이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가 이란 압박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도박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Q 용어설명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페르시아 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좁은 해협이다.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이곳을 지나며, 세계적 금융 허브로 부상한 걸프 연안 국가들이 가까이 있다. 그런 만큼 이곳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임금·노동조건 위해 싸우는 게 경제주의인가?

정선영

오늘날 임금·노동조건을 위한 노동자 투쟁(과 그 필요성)을 ‘경제주의’라고 폄하하는 주장이 꽤나 흔하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보다 의회 선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이나, 노동자 투쟁이 다른 (통상 중간적) 계급으로부터 연대를 거부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보는 민중주의적 경향으로부터도 경제투쟁을 폄하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그런데 노동운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주장을 접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노동계급 내에서 임금 격차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 근거해 그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하기보다는 더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 ‘양보와 나눔’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사회진보연대가 “임금 극대화에 전력투구하는 전투적 경제주의의 지양”이 노동자 내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인상 투쟁이 노동계급 내 임금 격차만 키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 전체 노동계급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몫이 정해져 있다면 이 말이 사실일 것이다. 어떤 노동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노동자들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 몫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계급 세력균형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을 보면 노동자들끼리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임금 격차는 근본적으로 경제가 조직되는 자본주의적 방식 자체에서 비롯한다. 이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양보와 나눔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 조직돼 있고 싸울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노동자들이 양보할수록 전체 노동계급의 몫이 줄고 그 몫을 늘릴 잠재력도 약화될 것이다.

잘 조직돼 있고 자신감 있는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임금을 올릴수록 그 성과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로 파급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변동 추세는 거의 비슷하다. 함께 오르고, 함께 내려간다.

또, 일각의 주장과 달리 노동자 투쟁의 고양은 노동계급 내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상이한 지불 능력에 따라 임금 격차를 키우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자들의 힘이 커질수록 자본가들의 이런 공격에 맞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노동조합이 전투적으로 투쟁했던 1987년부터 임금 격차는 축소됐고 그 추세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반면 1997년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격이 거세지고, 노동자 투쟁이 고전하자 임금 격차는 빠르게 증가했다.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을 폄하하는 주장은 노동계급의 처지를 개선시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진정



노동자 투쟁이 강했던 87년 이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 문제다. 임금·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중시하는 것을 ‘경제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경제주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치이다.

경제주의란 무엇인가?

경제주의의 고전적 형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 노동운동에서 등장한 개혁주의 경향이었다. 러시아의 노동자 투쟁은 18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곧이어 생겨난 경향인 경제주의자들은 “노동자 운동을 노동자들의 부분적 이익을 지키는 투쟁으로만 체계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경제투쟁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 노력을 지지하고, 정치투쟁에서는 중간계급의 자유주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1900년경부터 레닌은 경제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경제주의자들이 경제투쟁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니다. 레닌은 경제주의자들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시키고, 정치투쟁을 중간계급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의탁하려 한 점을 특별히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제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의 쟁점들만 강조할 뿐, 혁명적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려는 더 폭넓은 정치투쟁과 정치적 조직화 노력을 반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레닌은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혁명가들의 구실을 강조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경제투쟁은 혁명적 정당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토대다. 왜냐하면, 경제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대항한 노동계급의 투쟁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더 나아가 경제투쟁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혁명적 노동계급 정당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다.”

오늘날 대공장·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을 경제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러시아 경제주의자들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유기적 관계(따라서 둘의 결합 잠재력)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와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

자본주의적(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와 정치의 형식적 분리가 강화된다. 노동운동이 (먹고사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권력 문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급진적이 되는 것을 지배자들이 막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은 상당 부분 용인하면서도 정치파업을 한사코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와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간파해 왔다.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것과 착취를 위해 정치적 억압 기구(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래서 레닌은 정치를 “집중된 경제”라고 말했다.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이다. 흔히들 요구를 기준으로 정치투쟁이나 경제투쟁이나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차이를 요구 자체가 아니라 투쟁 양상의 차이로 봤다. 정치투쟁은 전 계급적인 것인 반

면, 경제투쟁은 부문적 운동인 것이다.

“노동계급이 지배계급에 대항해 하나의 계급으로서 행동하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지배계급을 굴복시키려는 운동은 모두 정치 운동이다.”

따라서 흔한 오해처럼 정치투쟁은 제도개혁 등을 위한 것이고, 경제투쟁은 임금 등을 위한 것이라는 식의 구분은 옳지 않다. 부분(부문)의 투쟁이나(전술) 계급적인 투쟁이나 하는 관점으로 봐야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2009년 여름에 벌어진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그 한 사례이다. 쌍용차 투쟁은 특정 기업에서 불거진 경제투쟁으로 시작했지만, 투쟁이 경제 위기 고통증상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초점이 되면서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됐다.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을 주류 언론들과 전경련 등의 사용자 단체들은 맹비난했고,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에 맞서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청년·학생들의 연대가 조직되며 투쟁은 계급 대리전 양상으로 발전하는 듯했다. 아쉽게도 노동운동 측이 그 투쟁의 성격에 걸맞게 폭넓고 효과적인 연대를 건설하지 못하면서 투쟁이 패배했지만 말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방아쇠 구실을 했던 철도 노동자 투쟁은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에 맞서 싸웠다. 이는 범위로서는 경제투쟁이었지만, 성과연봉제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노동개혁 정책이었으므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경제투쟁이었다. 2016년 9월에 시작한 철도 파업은 10월 말 박근혜 퇴진 운동과 맞물리며 퇴진 운동

의 일부로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에 양분을 제공하며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성공한 이후 지난 2년간 민주노총 조직률은 10퍼센트 가량 증가했고, 여러 사업장에서 투쟁들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정치투쟁의 승리가 경제투쟁을 고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역동적 상호관계는 독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생생하게 서술한 바 있다. 비록 그녀가 혁명적 시기에 분출하는 대중 투쟁을 다뤘지만 본질적인 동역학은 비슷하다.

“정치 행동의 물결이 고양된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경제투쟁의 싹을 틔우는 기름진 퇴적물이 남고, 또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 말하자면,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에 언제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노동자계급 역량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이다. … 즉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현학적인 도식들이 설명하는 것과 달리, 완전히 분리되거나 서로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서 서로 얹혀 있는 두 측면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치운동이 성장하기를 바라다면 임금·노동조건 등을 둘러싸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벌이는 경제투쟁을 적극 옹호해야 한다. 현재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좌파가 자꾸만 노동자 일상투쟁의 의의와 섟을 죽이려 애쓰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일상적 시기에 모든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 때에도 노동자들은 경제투쟁을 통해 자신의 조건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자기 일터에서 경제투쟁을 대강 접어 두고서 더 큰 정치 투쟁(운동)에 나서라고 강변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도덕주의적인 설교로 여겨질 뿐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노동자가 자본과의 일상 투쟁에서 비겁하게 굴복한다면 그들은 그 어떤 한층 더 광범한 운동을 일으킬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노동조합 속 사회주의자들은 일상적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애써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레닌이 강조했듯이 혁명적 조직을 건설하려 애써야 한다.

추천 자료

- ‘마르크스주의는 정치 선전으로 환원될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스21》 14호
- ‘경제주의란 무엇인가’, 던컨 헬러스, 《마르크스21》 14호
-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노동자연대 소책자
-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벌개혁론 비판》, 강동훈, 노동자연대 소책자



사진 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 하청 임금체불 해결하라 원하청 단결투쟁으로 임금인상 쟁취하자

권준모 현대중공업지부 소위원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다시 심해졌다. 이달 들어 건조부, 도장부 등의 일부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

6월 18일에는 하청 노동자 수십 명이 출근길 집회를 하고, 공장 안에 있는 원청 담당 부서 앞에서 연좌시위를 했다. 도장부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임금 체불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달에만 무려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

지난 3~4월에도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했다. 고통에 시달리다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2000여 명이 일손을 놓았고, 수백 명이 '하청다함께'라는 SNS 소통방에 모였다. 그중 수십 명이 출근 집회 등을 하고 수백 명 규모의 원하청 연대 집회가 열렸다.

결국 사측은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당시 법인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태를 일단 봉합하려 했던 것 같다.

사측은 법인 분할을 강행한 뒤 다시 공격에 나섰다.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달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법인 분할은 하청 노동자들을 또다시 임금 삭감과 체불, 체납으로 내몰 것이 분명하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법인 분할이 낳을 구조조정의 고통,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삭감 등에 반대해 원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노조 집단 가입 운동

지난해 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조선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임금이 평균 20퍼센트 이상 깎였다. 소리소문 없이 잘리고 복지·수당이 깎이고 임금 체불이 밥 먹듯 이어져 온 것을 볼 때 고통은 그 이상이었을 것이

다. 무급휴업이 만연해 86.5퍼센트가 휴업 수당조차 못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삭감된 임금을 복원하고자 사내하청지회가 임금 25퍼센트 인상 운동을 시작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 삭감도 고려한 요구다.

현대중공업지부(정규직 노조)도 이 요구를 함께 내걸기로 했다. 6월 11일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 확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사1노조 정신을 올곧게 실현해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는 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지부장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노조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임단협 때마다 반복된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약속을 공문구로 만들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말 반갑고 꼭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 3만 명이 회사를 떠나고 임금 삭감 등의 공격을 받을 때,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제대로 된 연대를 조직하지 않았다. 정규직 노조는 구조조정 공격 앞에서 ‘내 코가 석자’라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함께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

투쟁을 조직화 뒤로 미루지 말아야

노조 지도부는 원하청 연대를 선언하면서, 첫 단계로 하청 노동자 2000명 이상을 집단 가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직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교섭을 추진하면서 원하청 공동으로 파업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한다.

조직 확대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자칫 투쟁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 임금 체불 해결과 인상 요구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다.

도장2부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에 항의해 투쟁을 시작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떼거리로 몰려가 같이 싸워야 한다. 노조가 연대 투쟁 지침을 내리고 힘을 보여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승리한다면,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고무받을 것이고 투쟁과 조직화가 더 확대될 수 있다.

대우조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5월 하청 노동자 2000여 명이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정규직 노조와 하청노조 활동가들이 이 투쟁을 적극 지원했고, 결국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하청 노동자 12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노조에 가입했다.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며 함께 투쟁하는 가운데 조직화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 임금 25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는 리본을 가슴에 달고, 간부·활동가들이 노조가입 설명회를 열고, 6월 20일 원하청 연대 집회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6월 20일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원하청 공동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브라질: 보수소나루에 맞서 수천만 노동자 파업

★ 21세기 레닌주의④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반대 무효 소송에 이준 말고 투쟁해야

★ 정부의 개정 신안법: 위험의 외주화 허용, 작업종지권 개악

★ ‘성평등’ 운운하며 채용 성차별 감사는 정부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반군·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차별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장호중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노조(보건 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공동투쟁을 벌여왔다. 5월 21일 1차 공동파업에 이어 6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함께 농성하며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3개 노조가 연대투쟁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조속한 전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6월 7일부터는 13개 국립대병원을 순회하며 노동조합과 사측을 한자리에 불러 면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인 '직접고용'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에서 결코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자회사 방안을 열어 놓고, "노사가 잘 해결하라"고 중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유은혜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 인기를 얻어 놓고, 장관이 된 뒤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은 국립대병원에 경영평가 점수를 깎았으며 재정 지원 삭감 압박을 가했다. 왜 그런 수단을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인가. 또, 국립대병원 사측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핵심 근거가 예산 부족이므로 하다못해 재정 지원만 조금 늘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생명과 안전, 정규직화, 공공의료 등) 5월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파업 집회

결국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건 정규직화에 필수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일 뿐이다. 국립대병원들은 이런 상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이 제한돼 있으니 직접고용하면 정규직이 손해 본다니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다른 공공부문에 끼칠 영향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필수적인 재정지출을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2년 연속 정부 재정이 수조 원씩 흑자를 기록했다. 그 돈을 삼삼바이오 등 제약·의료기기 회사들에 줄 생각만 했지(연구개발비 지원), 노동자들에게 주지는 않겠다는 게 문제인 정부 '노동 존중'의 실체다.

국립대병원을 측은 이런 교육부의 의중을 꿰뚫어 보면서 직접고용을 회

피하고 있다.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말이다.

신임 서울대병원장은 17일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잘 모른다고 발뺌했고, 7월에야 입장을 내놓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다. 다른 국립대병원장들도 눈치만 보고 있다.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자회사 방안을 고수하거나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처우 개선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항의를 강화해야 한다. 6월 26일 2차 공동파업이 그런 효과를 내도록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연대투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석 달 가까이 연대투쟁 속에서 자신감과 투지를 높여 왔다. 이들 중 일부는 새로 조직된 젊은 노동자들로, 차

별에 대한 분노와 변화에 대한 기대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새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보면서 다른 노동자들도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런 장점이 투쟁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직접고용은 정부(와 국립대병원) 정책을 후퇴시켜야 하는 만만치 않은 요구인데다, 이 투쟁의 성패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은 보건의료 서비스에도 중요한 문제이고, 병원 노동자 전체의 조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정규직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서고 있는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에서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동 집회 등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그

런 것처럼 공동 파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한편, 3개 산별연맹·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공동투쟁의 목표를 '직접고용'으로 한정하고 직접고용의 조건은 병원별로(사실상 노조별로) 대응한다면 연대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투쟁의 최종 결과를 병원별 불균등성에 내맡기면, 일부 병원은 노동자들에게 나쁜 조건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또, 일부 병원이 표준임금체계를 합의하면, 다른 병원들도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체계를 통한 저임금 고착화를 강요하려 할 것이다.

전체 연대 전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불가피하지 않은 후퇴를 강요받지 않고, 균등하고 고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다. 그래야 다음번 연대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9
8월 22일(목) ~25일(일)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노동계급과 노동운동

-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 여전히 계급이 중요한가?
— 한국사회의 분단선, 갑을인가 계급인가.
-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임금 격차와 연대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변화 — 노동운동에 주는 함의
- 노동자 경영참가 — 일터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살려줄 것인가
- 노동조합과 사회변혁 —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쟁점과 전망
- 직무급제 임금개편 — 개선인가 개악인가?
- 조선업 위기와 저항 — 대우조선 매각/현충 인수 저지 투쟁과 과제
- 산업재해와 자본주의
— 말뿐인 '안전' 약속에 계속되는 죽음과 고통
- 재벌에 맞선 투쟁과 노동운동

이밖에도 세계 정치, 동아시아 정세, 한국 정치,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정치, 여성·성소수자와 관련된 수십 개 주제가 더 있습니다. 더 많은 주제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신청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 | marxism.or.kr

